

11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핵심용어(용어사전)

- * 조정 :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
- * 중재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 양쪽이 양보한 끝에 일치된 결과를 법원에 진술하는 것으로, 조서에 적은 때에는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 * 제소전 화해: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행하여지는데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상화해와 효력이 같다.

■ 사례 :

<사건의 개요>

중학교 2학년 학생 A는 같은 반 학생 B로부터 2학년 1학기 초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① 숙제가 하기 싫어지면 A에게 대신시키곤 했고, ② 2학년 2학기 초반에는 한자 쓰기 숙제를 A에게 시켰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A의 얼굴과 가슴 등을 심하게 폭행하여 그 사실이 교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③ 화장실에 갈 때도 특별한 이유 없이 A를 끌고 다녔고, A가 이를 거부하면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④ A를 폭행하다가 A가 소리를 치면 더 으스스한 곳으로 끌고 가 폭행을 계속하였고, 그 광경을 같은학교 친구들이 보게 하였다.

⑤ A가 사망하기 전날 B는 A에게 전화하여 A가 같은 학원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학원등록 하지 않고 장난하냐”, “이 개새끼야 너 왜 매일 내일로 미루냐”고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하였다.

A는 2학년 말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자살을 하였다. A의 부모와 형은 B의 부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A의 부모 및 형의 청구는 타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실과 자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자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할 것인가 여부 및 왕따로 인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왕따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의 결말>

B가 A를 괴롭힌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A가 그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A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B가 A를 1년간량 괴롭혀와 A가 학교내 왕따라 소문이 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예비적 청구 인용)하였으며, 위자료 내역은 망인인 A 2,000만 원, 부모 각 400만 원, 망인인 A의 형 200만 원임

<전문가의 의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가해학생은 불법행위 당시 중학교 2학년 때만 14세 정도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등 민법 제913조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규범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시켜야 할 교양 및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수개월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을 방지 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도 가해학생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750조에 따라 망인인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와 형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본 학습>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상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제5조 제1항)

성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의 개념속에 포함시켰으나(동법제2조1호), 다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동법제5조 제2항)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였다.

(2) 특정한 폭력행위가 학교폭력대책및예방에관한법률과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즉 중첩되는 사례)에서 형법등과 배타적관계에 있는 것인지 또는 학교폭력대책및예방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중대한 범죄는 소년법만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경미한 학교폭력에서는 학교차원의 대응을 우선시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소년사법이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즉 적어도 경미한 학교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권자(피해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법기관에 대한 고소가 없는 한 학교내에서의 선도·징계조치와 분쟁조정만으로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행위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다. 가해자나 피해자 중

어느 일방만이 학생인 경우, 당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학교폭력

(1) 상해죄 :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증언 등에 대한 보복등의 목적으로 상해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한 경우나 특수상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신체상처(예 : 피하출혈, 종창, 찰과상, 처녀막파열), 일부박리(예 : 치아탈락), 성병전염(예 : 성병감염), 기능장애(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일시적이 아닌 인사불성) 등이 포함된다.

상해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없으며 유형적방법(예 : 폭행), 무형적방법(예 : 협박, 경악), 직접적·간접적,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규정이 있으며, 형법제263조에서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점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해의 동시범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동점범으로 처벌한다는 특례규정이다. 이 규정의 적용요건으로는 2인이상의 행위가 서로 의사연락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객체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며, 상해의 결과는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건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건 불문하며, 누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원인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2)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증언 등에 대한 보복등의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본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유형력이란 광의의 물리력을 말하므로 무형력을 수단으로 하는 협박죄와 구별된다. 역학적 작용인 구타, 밀치는 행위, 손·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좁은 공간에서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 수염·모발의 절단, 일시적인 자유의 구속 등의 경우와 화학적·생리적작용인 심한 소음·음향, 계속 전화를 걸어 벨을 울리게 하는 경우, 폭언의 수차 반복,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경우, 최면술을 거는 경우, 마취약을 사용한 경우 등의 경우와 에네르기 작용인 빛, 열, 전기, 냄새등의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 아니다.

(3) 감금죄 :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장소적으로 제한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감금의 수단으로는 유형적 방법(자물쇠를 채우는 것, 감시인, 맹견, 폭력, 포박, 마취)·무형적 방법(협박, 위계, 수치심)을 불문한다. 목욕중인 부녀의 옷을 숨겨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내리지 못하게 차를 질주하는 것,

지붕에 올라간 사람의 사다리를 치우는 것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작위·부작위를 불문하므로 방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잠근 후에 그 사실을 알고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경우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한 경우도 감금이 된다. 또한 한정된 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감금이 된다.

(4)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증언 등에 대한 보복등의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하지만(협박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해악의 내용은 모든 법익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되며 해악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것이든 불문하며, 해악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고지도 협박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경고는 공포심을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말하며,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고지된 경우에는 협박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에 불과하므로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

(5) 약취·유인죄 :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겨 실력적 지배하에 둬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 약취·유인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으로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심신상실·항거불능상태의 이용, 수면제·마취제의 사용, 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 약취·유인의 수단으로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기망·유혹은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있는 자만이 유인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약취·유인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기망·유혹에 의해서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상태에 두어야 한다.

(6)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가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불특정이면 다수인·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문한다. 불특정인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공도상의 통행인, 공개광장

의 청중) 다수인이란 단순히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다수임을 요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언성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이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그 내용은 불문한다. 따라서 악사·추행에 제한되지 않으며, 공지의 사실도 포함한다.

장래의 사실도 현재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할 경우에는 사실에 포함되며, 직접 경험한 사실 이외에 추측·신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된다. 사실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이어야 하며, 허위의 사시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하는 것이며,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지 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7) 모욕죄 : 공언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죽일 놈, 망할 년). 모욕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서면·거동을 불문하나,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가치의 존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 의미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무뢰한 행동은 모욕이 아니다.

(8)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수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갈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광의의 폭행)공갈죄는 처분행위를 본질로 하므로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는 강제적·심리적 폭력에 한하며, 상대방에게 의사형성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물리적 폭력은 제외된다.

폭행·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므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나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행위자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에게 외포심 야기되어야 하며, 외포심이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을 및 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심적 상태를 말한다.

(9)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상습범과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 및 특수강요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의사결정·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직접적·간접적 불문한다. 맹인의 안내자에 대한 폭행, 장애인의 wheel chair 손괴,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는 것, 마취제·수면제 사용하는 경우도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의사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폭력과 상대방의 의사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강제적 폭력을 포함한다.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의 협박을 말하며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강요죄에서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은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의 의사결정·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강요죄에서의 권리행사 방해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행사여부가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고, 재산적권리·비재산적권리를 불문한다.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의 강요란 의무 없는 자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 또는 수인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10) 성폭력

2008. 3. 14. 개정법률에서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켰다(성폭력 범죄 및 피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및 제5조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성폭력범죄의 정의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다음과 같다.

- ① 형법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1항 1호)
- ②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1항 2호)
-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1항 3호)
- ④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1항 4호)
- ⑤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1항 5호)
- ⑥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성폭

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2항).

3.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이란 학급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사사건건 놀린다거나 이유 없이 툭툭 치거나 욕설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서 그 특징적 요소로는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힘의 불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난다. 가해자는 또래집단 내에서 일반 학생들 이상의 큰 영향력을 가지며 심지어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는 잘난 척을 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학생과,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방관자는 집단따돌림에서 방관자는 가해자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들이 목격한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상황을 유지시키는데 일조한다. 따라서 방관자가 피해자 편에 선다면 집단따돌림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예방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집단괴롭힘(bullying)

집단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에 는 구타,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과 소외, 심리적 배제 등 간접적인 폭력 모두를 포함 한다.

집단 괴롭힘 현상은 더 이상 학생들 내에서 해결해야 할 또래 관계라고 방관할 수 없으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집단괴롭힘을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폭넓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인 고립이나 배척, 소문 퍼트리기 등 간접적 괴롭힘을 하는 반면, 폭력과 같은 직접적 괴롭힘은 남학생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보이는 행동은 가정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며 인지적, 행동적, 동기적, 정서적인 결손을 초래한다.

일단 피해자가 되면 다시 피해를 당하기 쉬우며, 피해자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학교 공포증, 무단 결석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등교를 회피하고 외로움을 나타내며,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상을 보여준다.

5.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 등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이메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형태의 전달수단을 통하여 댓글, 게시물, 사진합성물, 동영상 등의 형태로 타인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행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인터넷 게시판, 채팅, 쪽지 등의 방법을 통한 욕설, 특정인을 겨냥한 명예훼손, 모욕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자기 신분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이버공간의 익명의 상황), 전파성 등의 특징으로 정보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작용을 낮추고 자기규제를 어렵게 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는 인격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모욕적이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또는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인 경우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범죄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 정리하기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의 개념속에 포함시켰으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였다.

특정한 폭력행위가 학교폭력대책및예방에관한법률과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즉 중첩되는 사례)에서 형법등과 배타적관계에 있는 것인지 또는 학교폭력대책및예방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중대한 범죄는 소년법만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경미한 학교폭력에서는 학교차원의 대응을 우선시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소년사법이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즉 적어도 경미한 학교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권자(피해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법기관에 대한 고소가 없는 한 학교내에서의 선도·징계조치와 분쟁조정만으로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다. 가해자나 피해자 중 어느 일방만이 학생인 경우, 당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집단따돌림이란 학급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사사건건 놀린다거나 이유 없이 툭툭 치거나 욕설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서 그 특징적 요소로는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힘의 불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난다.

집단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에에는 구타,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과 소외, 심리적 배제 등 간접적인 폭력 모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망 등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이메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형태의 전달 수단을 통하여 댓글, 게시물, 사진합성물, 동영상 등의 형태로 타인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행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 평가하기

문제 1. 학교폭력대책및예방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및예방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성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의 개념속에 포함시켰으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및예방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였다.

(3)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다.

(4) 가해자나 피해자 중 어느 일방만이 학생인 경우, 당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1)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제5조 제1항)

문제2. 집단괴롭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집단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에에는 구타,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은 포함되나 소외, 심리적 배제 등 간접적인 폭력은 제외된다.

(2) 집단 괴롭힘 현상은 더 이상 학생들 내에서 해결해야 할 또래 관계라고 방관할 수 없으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 집단괴롭힘을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폭넓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4)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며 인지적, 행동적, 동기적, 정서적인 결손을 초래한다.

해설 : 정답 (1)

집단괴롭힘(bullying)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에는 구타,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과 소외, 심리적 배제 등 간접적인 폭력 모두를 포함한다.

문제3. 사이버폭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보통신망 등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이메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형태의 전달수단을 통하여 댓글, 게시물, 사진합성물, 동영상 등의 형태로 타인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행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2) 인터넷 게시판, 채팅, 쪽지 등의 방법을 통한 욕설, 특정인을 겨냥한 명예훼손, 모욕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 전파성 등의 특징으로 정보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작용을 높이고, 자기규제를 쉽게 할 수 있다.

(3) 모욕적이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또는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인 경우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범죄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해설 : 정답 (2)

인터넷 게시판, 채팅, 쪽지 등의 방법을 통한 욕설, 특정인을 겨냥한 명예훼손, 모욕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자기 신분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이버공간의 익명의 상황), 전파성 등의 특징으로 정보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작용을 낮추고 자기규제를 어렵게 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는 인격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